

6개월 괴롭힘 당한 네팔 노동자...근로감독기관은 뭐했나

영암 축사 이주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네팔 이주노동자가 6개월에 걸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근로 감독 기관들은 제대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해야하는 사업장 조사는 '사후약방문' 식으로만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인권 사각지대'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때마다 핑계로 내세우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무신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농장주 A(44)씨가 지난 28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입국해 해당 축사에서 6개월 간 일했던 이주노동자 B(28)씨가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주장하며 지난 8일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한

고용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관리 부실

같은 사업장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망 전 피해 신고에도 조치 안돼

폭행·임금체불 혐의 농장주 구속

네팔 언론에 사망 관련 소식 보도되기도

바 있다.

당시 B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피해 사실을 토로한 증언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고 네팔 언론 '칸티푸르'에도 B씨의 사망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다.

해당 축산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B씨 사망 전, 네팔 담당자가 있는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도 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점검도 문제가 발생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소극적 점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무안·영암·강진·해남·신안·완도 지역을 관할하는 목포지청의 경우 올해 259개 일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를 비롯,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등을 맡고 있지만 정작 현장 점검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세부적인 사업장 점검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할 사업장 수를 할당해주면 최근 3년 내 신고사건 3건 이상인 업체나 임금체불 이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력 등이 있는 업체 위주로 점검에 나서는 수준이라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포지청은 지난해 270곳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했지만 해당 사업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잠깐 반응하고 금세 잊혀지는 현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며 "외국인근로자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지난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진미 기자 jinggi@kwangju.co.kr

ईपीएसबाट गएका नेपाली श्रमिकमाथि कोरियामा यातना



영암의 한 축산업장에서 괴롭힘으로 사망한 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네팔 현지 언론 '칸티푸르'에 "한국에서 고문을 당한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있다. <칸티푸르 홈페이지 갈무리>



활기 넘치는 '캠퍼스의 봄'

맑고 따듯한 날씨가 계속된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대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농구경기를 하며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일 못한다' 선원 폭행치사 선장 2심도 28년형

시신 유기 도운 조리장 4년 선고

'일을 못 한다'며 동료 선원을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형이 선고됐다. 선장의 가혹 행위를 방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선원(조리장)에게도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9일 살

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6)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8년형을 유지했다. 조리장 B(50)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지역의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1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폭행과 괴롭힘을 방조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C씨를 공구로 폭행하거나 호스 바닷물을 쏘고, 비오는 날 천장 없는 어구 적재칸에서 잠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C씨는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소금 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캐비닛에 보관하고, 옷을 입히거나 식사를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미필적 고의로 살해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석유화학 산업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청한다

플랜트 노조원 54% 줄고

지방소득세도 58% 급감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지역 내 일자리가 급감한 여수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8일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에 3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여수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봉착했다는 게 여수시와 전남도 설명이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전남 산업의 주축이다. 철강·조선과 함께 전남의 3대 주력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284개에 이르고 종업원만 2만 2500명(2022년 광업·제조업 통계자료, 통계청)이 넘는다.

지역사회에서는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할 정도로 어렵게 된 지역 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지역 플랜트산업의 경우 한때 1만5000

명에 달했던 노동조합원 수가 급감했다.

이달 여수지부 플랜트 노동조합원 수는 4500명으로 추정되는데, 전년도 같은달(9953명)과 비교하면 54%(5453명)나 줄어든 수치다.

플랜트 기업들의 밥줄은 석유화학 공장 설비를 일정기간 경과시 보수하는 '대정비'와 신증설 공사로 구분되지만, 대정비 일감이 급감했고 신증설 공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산단 입주 기업의 플랜트 신·증설 발주 금액이 전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위기는 점차 현실화될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기업들 수익성이 좋지 않으니 세금도 못 걷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법인지방소득세로 1672억원(2023년)을 거둬들였지만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557억원으로 무려 66.7%나 급감했다. 지방소득세도 무려 58.5%나 감소해 전국에서 이천(69.7%)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여수 노동시장의 고용 특수성을 반영해 일용근로자 감소 현황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